

# 2026년 한국사회, 자산불평등 심화와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근거로 한 비판적 검토

---

## 먼저, 공주민제(DCA)를 2분 만에 이해하기

이 자료집은 “자산불평등이 불가피가 아니고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며,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금융에도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, 재분배 지출을 늘려야 한다”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.

공주민제(DCA: Distributed Citizen Assets)는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되, 결론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인다.

- \*\*세금(현금)\*\*은 매년 정치로 싸우고 후퇴한다.
-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“얼마를 걷어 무엇을 해주나”만이 아니라,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본소득(배당·이자·시세차익)과 결정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규칙을 설계하나가 핵심이다.
- DCA의 한 줄 정의: 시민이 ‘소득의 사후 분배’가 아니라 ‘자산·지분의 사전 귀속’에 참여하도록, 국가·사회가 만들어내는 몫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(신탁·계정)에 누적 귀속시키는 제도다.

여기서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, 최소한만 쓴다.

- 시민 공동자산(시민신탁/시민계정): 세금으로 거둔 돈을 그해 다 써버리는 대신, 일부를 \*\*자산(지분·수익권)\*\*으로 바꿔 쌓아두는 “국민 공동의 자산 그릇”이다.
- 조세의 지분전환(TEC)(처음 등장): 어떤 세목(예: 법인세 일부, 자본이익 과세 일부)을 현금으로만 받지 말고, 일정 비율은 “주식·수익권” 같은 자산 형태로 받아 시민 공동자산에 넣는 방식이다. (이 자료집 독자가 모르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“현금세 → 자산귀속” 정도로만 이해하면 충분하다.)

---

## 2026년 경제 전망과 자산불평등 현황 진단(정세은)에 대해

### (1) 원문 요지(핵심만)

소득불평등보다 자산·부채 불평등이 더 심각하고, 특히 고소득·고자산 계층이 더 많은 부채

를 통해 자산증식에 나서며 격차를 키운다는 점을 통계로 제시한다.

## (2) DCA 관점의 결손(무엇이 빠졌나)

이 진단은 정확하다. 다만 처방이 “과세 강화”로만 이어지면 다음 공백이 남는다.

### 1. 레버리지(빚) 접근권의 비대칭

부자들이 빚을 더 내서 자산을 불린다는 말은, 단순히 “부자가 욕심이 많다”가 아니라 **금융 접근권(담보·신용·정보·상품 접근)의 비대칭**이 엔진이라는 뜻이다. 세금만으로는 이 엔진을 완전히 멈추기 어렵다.

### 2. ‘부채를 줄여라’가 아니라 ‘시민도 자산을 가져야 한다’가 되어야 한다

불평등의 핵심은 “누가 더 많이 쓰나”가 아니라, 누가 **자본소득을 구조적으로 받**나다. 자본소득의 ‘발생원천’을 바꾸지 않으면, 매년 재분배를 두고 정치가 소모되고 후퇴한다.

## (3) DCA식 수정안

발제 1의 결론부에 아래 3문단을 덧붙이면, “진단 → 제도 전환”으로 연결된다.

- **레버리지 격차의 본질은 ‘접근권’ 격차다.** 고자산층은 담보·신용·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, 그 접근이 다시 자산증식을 낳아 격차를 되먹임한다. 따라서 불평등 대책은 ‘부채 억제’만이 아니라 **시민의 자산 접근 통로를 제도화**하는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.
- **세금은 필요하지만, 충분조건이 아니다.** 세금은 매년 정치적으로 바뀌고 후퇴할 수 있다. 반면 자산(지분·수익권)의 귀속 규칙은 한번 고정되면 장기적으로 작동한다. 그래서 불평등 대책은 “현금 재분배”와 함께, **시민 공동자산(신탁·계정)에 자본소득의 원천을 누적 귀속**시키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.
- **‘현금복지 + 자산귀속’의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.** 취약계층 보호는 현금(복지)이 담당하되,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자본소득을 받는 기반(시민 공동자산)을 쌓아야 한다. 이것이 DCA(공주민제)가 말하는 ‘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길’이다.

---

## 감세정책 영향과 현행 조세체계 구조 진단 및 제언 (김현동)에 대해

### (1) 원문 요지(핵심만)

부동산 세제에서 **거래세 비중이 보유세보다 높고**, 현재 결정례 등을 근거로 거래세보다 보유세·양도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입법론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제시한다.

또한 취득세가 지방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라 세율 인하 시 대체재원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.

## (2) DCA 관점의 결손(무엇이 빠졌나)

발제 2는 “세목 설계”를 정교하게 다룬다. 다만 DCA 관점에서는 다음 질문이 추가로 필요하다.

### 1. 보유세를 올리면, 그 돈은 ‘누구의 자산’이 되나

보유세를 강화해도, 그 세수가 단지 일반재정으로 흡수되면 시민은 계속 “그해 예산”에 의존한다. 후퇴가 반복된다.

DCA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묻는다. **보유세·개발이익·지대 환수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으로 귀속시키면 어떨까.**

### 2. 지방재정 논점이 ‘세율 논쟁’에 갇히기 쉽다

취득세 의존 구조를 바꾸려면 “취득세를 내리자/말자”를 넘어서, 지방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**\*\*구조적 수입원(귀속 규칙)\*\***이 필요하다.

## (3) DCA식 수정안

발제 2의 정책제언 파트에 아래를 “추가 선택지”로 붙이면, 세제 논쟁이 “귀속 규칙”으로 확장된다.

- **(제안 A) 보유세 강화분의 일부를 ‘시민 공동자산’으로 자동 귀속**  
보유세(또는 지대·개발이익 환수) 강화는 “걸어서 쓰는 것”에서 끝나기 쉽다. 강화분의 일정 비율을 시민 공동자산(신탁/계정)에 적립해 **미래의 기본배당 재원**으로 삼으면,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.
- **(제안 B) 지방재정 공백은 ‘지방 몫 자동배분 규칙’으로 메운다**  
취득세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해도, 지방재정 공백이 걸림돌이다. 이때 대안은 “다른 세목 올리기”만이 아니라, 시민 공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(배당·이자·인프라 수익) 중 일부를 **지방에 자동 배분**하도록 규칙을 고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.
- **(제안 C) ‘현금세’와 ‘자산귀속(지분전환)’을 분리해 설계한다**  
정치·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현금세가 담당한다. 동시에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영역에서는, 세원 일부를 **자산(지분·수익권)** 형태로 귀속시키는 “자산귀속 레일”을 병렬로 만든다. 이것이 DCA의 핵심 설계다.

---

## 토론문(조영철)에 대해

## (1) DCA 관점에서 토론 1에 추가돼야 할 질문

토론이 어떤 결론에 서든, DCA 관점에서는 아래 질문이 빠지면 논의가 “세율 조정”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.

- 세목(보유세/거래세/양도세)을 바꾸는 것만으로 ‘무지분 상태’를 끝낼 수 있다.
- 세제가 강화되더라도 정치적 후퇴가 반복될 때, \*\*시민이 매년 ‘지출정치’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(귀속 규칙)\*\*가 있다.
- 부동산·금융에서 환수한 몫이 일반재정으로 소멸되는 대신, 시민의 장기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**자동화된 귀속 장치**를 도입할 수 있다.

## (2) DCA식 “한 문단” 제안(토론 1 말미에 붙일 문장)

- 자산과세 논쟁은 세율과 세목의 조합을 넘어, 환수한 몫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되는지(현금 지출인가, 시민의 자산 축적인가)를 함께 다뤄야 한다.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별개로, **환수분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(신탁·계정)에 자동 귀속시키는 장치**를 병렬로 도입하면, 조세저항과 정책 후퇴의 위험을 줄이면서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.

---

## 감세로 주가지수 부양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?(이상민)에 대해

### (1) 원문 요지(핵심만)

토론 2는 주가지수 상승을 국부나 실물경제 개선으로 자동 등치하는 관행을 비판하고, GDP(플로우) 중심의 국부 개념, 주식의 잔여청구권이라는 관점, 제도 신뢰·계약집행 가능성 개선(상법 개정 등)과 노동안전 강화가 주가와 GDP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한다.

### (2) DCA 관점의 결손(무엇이 빠졌나)

이 논지는 “주가=국부” 단순화를 교정하는 데 유효하다. 다만 불평등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는다.

- 주가가 오르면 ‘누가’ 이익을 얻나

제도 신뢰가 개선되어 주가가 오를 수 있다. 그러나 주식 소유가 극도로 집중돼 있으면, 그 상승은 **성장(플로우)의 과실을 소유(스톡)로 빨아들이는** 경로가 될 수 있다. 실제로 자료집에는 상위 소수 주주 집중과 주가상승 시 격차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있다.

### (3) DCA식 수정안

토론 2의 결론부에 아래를 덧붙이면, “성장-주가-불평등” 연결고리가 완성된다.

- 주가 상승이 실물(생산성·제도 신뢰) 개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, **주식 소유의 집중이 크면 주가 상승은 불평등을 확대**할 수 있다.
- 따라서 정책 목표는 “주가를 올리자/말자”가 아니라, **성장·제도개혁의 과실이 시민에게도 자동 귀속되는 구조**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.
- DCA 관점에서는 이를 위해, (1) 자본이익 과세 정상화(토론 3의 주제)와 함께, (2) 일정 비율은 현금재분배로만 쓰지 말고 **시민 공동자산에 자산 형태로 누적 귀속**시켜, 주가 상승의 과실이 장기적으로 시민의 배당·기본지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.

---

## 주식 양도차익 중심으로 본 자산 격차와 과세 공백 (류이근)에 대해

### (1) 원문 요지(핵심만)

토론 3은 최근 주가 급등 속에서 부유층 주식평가액과 차익이 크게 늘었고, 한국 증시의 양도차익 과세가 느슨해 “tax haven”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.

또한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도입이 미뤄지거나 폐지된 맥락과, 과세 공백이 금융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논리를 전개한다.

### (2) DCA 관점의 결손(무엇이 빠졌나)

토론 3의 결론(과세 정상화 필요)은 DCA도 동의한다. 다만 과세만으로는 다음이 남는다.

1. 과세는 ‘환수’이고, DCA는 ‘귀속’이다

환수(세금)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, 그 몫이 시민의 자산으로 쌓여 **다음 세대에도 작동하는 권리**가 되는지가 중요하다.

2. 주식 소유의 집중이 크면, 주가상승·감세·유예는 곧바로 ‘귀속 격차’로 번역된다  
2019년 기준으로 극소수 주주가 주식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다는 대목은, “주가 오르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”는 경고다.

### (3) DCA식 수정안

토론 3의 정책대안 파트에 아래 2단계를 추가하면, “과세 정상화 → 시민 자산화”로 논리가 달린다.

- 1단계(단기): 과세 공백을 메운다(토론 3의 결론 유지)  
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맞추고, 양도차익 과세 공백을 줄여 “소득 있는 곳에 과세” 원칙을 회복한다.
- 2단계(중기): 환수분의 일부를 ‘시민 공동자산’으로 귀속시킨다(DCA의 추가)  
과세로 확보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소진하는 방식만으로는, 정책 후퇴가 반복되기 쉽다. 그래서 확보 자원 중 일부는 “현금지출”이 아니라, **주식·인프라 수익권 같은 자산 형태로 시민 공동자산(신탁·계정)에 누적시킨다**. 이렇게 하면 주가 상승 국면에서도 그 과실 일부가 시민의 장기 배당·기분지분으로 연결된다.

---

### 맺음말: “증세 정치”를 넘어 “귀속 정치”로

자료집은 “민주주의 정치는 증세를 할 수 있는가”라는 고민과, 시민이 주체가 되는 증세 정치의 필요, 정치연합의 필요를 강조한다.

여기에 공주민제(DCA)는 한 문장을 추가한다.

- 증세 정치는 필요하다. 그러나 그 자체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끝내기 어렵다.
- 다음 단계는 **귀속 정치**다. 즉, 사회가 만들어낸 자본소득의 일부가 시민에게 “현금지출”이 아니라 **\*\*자산(지분·수익권)\*\***으로 자동 귀속되도록 규칙을 고정하는 정치다.
- 이 규칙이 고정되면, 감세·유예·특례 같은 후퇴가 반복되어도 시민의 자산 기반은 누적된다.
- 불평등 해소는 “더 걸자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. **누가 소유하나**를 바꿀 때,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.